

국민사와 냉전: 범아시아적, 범태평양적 비평으로*

리사 요네야마 토론토 대학

I. 들어가며

지난 수십 년간,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과거를 기억해야 할지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에서 목격되었다. 국내외적으로 교과서, 기념일, 기념관, 기념비, 정부의 간섭과 검열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은 이른바 ‘국민사(national history)’라고 할 수 있는 담론 지형을 중심에 두고 벌어졌다. 국민사란 역사를 물화하고 대개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재현하는 역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인종-민족적으로 혹은 영토적으로 규정된 실체로 여겨지는 하나의 국민 전체가 이러한 과거를 집단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공유하며 송고한 경험으로

* 이 글은 2016년 4월 17일 ‘인터아시안 커넥션 V: 서울 총회(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기조연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국민사를 주제로 하는 연설에 필자를 초대해 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와 사회과학협의회(SSRC)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은 토론자인 줄리엣 정 교수와 박명규 교수의 소중한 의견에 힘입은 바 크다. 1990년 이후 시정 문화 및 탈식민지화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출간 예정인 저서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Duke University Press, 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 나지원/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기억하게 된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걸친 국민사 논쟁의 모든 사례들은 주로 일본의 식민, 군사 폭력에 관한 기억 및 미결 배상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언어권의 주류 언론들이 예외없이, 그리고 거의 동시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폭력의 역사적 기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국제 분쟁, 소송, 대중적 논란에 관해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위안부’ 배상 문제에 관해 2015년 12월에 발표된 한·일 간의 ‘합의’, 그리고 2016년 5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이 있다. 정치 지리적 이해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국제적 퍼포먼스는 국가 대 국가의 화해를 촉진하여 군사-안보-경제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북미 여러 국가의 대중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을 촉발했다.

과거에 대한 태도는 현재의 시급한 현안이나 미래 구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때문에 국민사를 둘러싼 갈등은 정체성, 사회성, 진정한 소속감을 둘러싼 더 넓은 투쟁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국립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린 체니(Lynne V. Cheney) 전 이사장이 그때까지 UCLA 소속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른바 ‘국민사 기준’을 공박하면서 그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체니는 미국사와 세계사 서술의 기준이 인종과 성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매카시즘과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과 같은 문제적 역사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에 이른바 ‘역사학자들의 논쟁(Historikerstreit)’이 일어나면서 나치의 만행이 소련을 포함한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에 비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사를 두고 독일에서 일어난 여러 갈등은 서구에서 탈식민주의 인식이 고조되었던 냉전 이후의 분위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독일의 국가적 사죄가 유대인에게 유럽인들이 저지른 특수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참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외적이며 포괄적인 참회의 몸짓으로 칭송받기는 하지만, 독일 국민의 집단적 과거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누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느냐는 문제 역시 급진적이고 다양한 탈식민주의적 공론장에 활기를 지속해서 불어넣고 있다(El-Tayeb, 2011).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국민사 문제는, 비록 주된 초점이 역사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갈등과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즉, 서로 국가 공동체의 구성에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 규범, 정치감수성의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문화 전쟁(culture war)’인 것이다.

‘문화 전쟁’이라는 개념은 원래 독일 국민 문화권 내에서 가톨릭 교회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이센 수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19세기에 개시한 운동을 지칭하는 독일어 Kulturkampf에서 비롯했다고 알려진다.¹ 오늘날 ‘문화 전쟁’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미국의 보수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던 패트릭 뷰캐넌(Patrick Buchanan)을 연상시킬 것이다. 1990년대에 뷰캐넌은 미국인의 정신, 전통, 그리고 그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도전에 맞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²

뷰캐넌의 연설에 토대가 되었던 사회적, 역사적 사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더욱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와 관련된 변화에 보수 세력 전반의 저항감을 집약한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 무렵에 일어났던 문화 전쟁은 그때까지 국민의 외곽을 규정한다고 여겨진 특징적인 인간상이나 정체성의 여러 범주가 다양해지고 불안정한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미국을 포함해 고도로 산업화된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어났다.³ 그중에서도 특

¹ 예를 들면, Hunter(2009)을 참고하라.

² 예를 들어, 이러한 변화에는 미국의 경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이민에 더욱 개방적인 국경, 공공 영역에서 정교분리의 헌법적 보장, 인종 및 기타 다양성 촉진을 위한 평등 조치와 같은 행정 정책, 그리고 젠더, 성, 가족 관련 조직의 변화가 포함된다. 뷰캐넌의 유명한 1992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 관해서는 Chapman(2009: 56-57)을 참고하라. 구체적으로, 뷰캐넌의 ‘문화 전쟁’ 선언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주창하던 자유주의적 정책을 겨냥한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여성 생식권, 환경보호, 동성애자 권리, 여성의 전투원 복무 등을 지지했다. 뷰캐넌은 이런 정책에 그저 반대만 한 것이 아니었다.

³ ‘문화 전쟁’은 현대 미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적으로 격렬해졌다. 뷰캐넌식의 ‘문화 전쟁’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폴린 헨슨(Pauline Han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0년 9월 10일 연설은 다음을 참고하라. http://www.australian-news.com.au/maiden_speech.htm(최종 검색일: 2010. 9. 11). Ang(2001)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식적인 다문화 정책 속에서 헨슨 현상을 간명하게 비판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공립학교에서 베일이나 히잡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 역시 프랑스 공화국의 전통적인 라이시테(laïcité, 세속주의)를 놓고 ‘문화

히 미국에서는 안정적이며 국가가 공인한 이성 부부가 결혼을 통해 구성한 백인, 중산층, 가부장적 핵가족이라는 냉전기의 이상적 가족상에서 가족의 실상이 점점 더 동떨어지는 모습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졌다. 즉, 문화 전쟁은 관습적으로 전제되는 구성원의 자격, 문화,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국민의 규범적 가치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사 갈등은 무엇이 모여 국민, 국가, 가족, 인간, 역사를 만드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범주에 속할 때 근대적이고 인간적이 되는지에 대한 감수성이 변화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합의의 부재’가 일어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에서 국민사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외적 갈등이 동아시아의 후기 자본주의, 후기 식민주의, 세기 전환기라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더 넓은 차원의 ‘문화 전쟁’의 구성 요소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글은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학자, 극우 논객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개정 논의에 관한 논란을 살펴본다.

교과서 개정 담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국민사 문제는 세기 중반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형성한 냉전 체제의 위험 요소들을 어떠한 점에서 반영하고 있는가? 국내 논쟁으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민족사 문제는 사실 국경을 넘나드는 여러 힘의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국민사 서술에 관한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된 과거, 특히 전쟁, 식민지, 잔혹행위 등의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열띤 공적 논쟁은 한 국가의 과거를 둘러싼 투쟁이 언제나 초국가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사를 둘러싼 국가 간 합의 부재 상황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정체성, 사회성, 소속감, 역사적 감수성 개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일본의 전시 중군 위안부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역사적 정의 구현 요구는 지속적인 운동과 국민사 문제를 초국가적이고 병렬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사 문제가 폭력, 공범 행위, 그리고 태평양 전역에 걸쳐 제국들이 냉전에 연루되면서 남긴 문제적 유산들에 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고

전쟁’을 벌인 사례다.

자 한다. 이하의 논의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사 문제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일말의 변혁 가능성을 조명하는 비판적 방법론이다.

II. 냉전의 신식민성과 1990년 이후 ‘시정(redress)’ 문화

미국, 아시아, 태평양 제도에서 일본의 군부와 식민 정부가 자행한 폭력의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찰했다. 이에 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점차 심화되는 ‘시정’과 배상이라는 문화적 행동양식이 냉전의 제도적, 인식적 구조와 지리정치적 고려가 만들어낸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과도기적 정의가 실패한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일본이 저지른 군사, 식민 폭력 행위가 초래한 손실에 관해 19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이러한 ‘시정’과 배상의 추구 — 혹은 필자가 1990년대 이후의 ‘시정 문화’라고 불렀던 현상 — 는 결코 균일한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종결되었던 전후 재판, 전쟁 배상금 해결,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국가 대 국가 간 관계 정상화가 많은 경우 폭력 사건을 시정하는 데에는 소용이 없으며 기껏해야 선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냉전의 과도기적 정의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러한 시정 불가능성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비대칭적 세계질서가 새롭게 구성되고 정당성을 얻게 되는 방식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Yoneyama, 2003: 57-93, 2016 참고).

미국 외시정책이 극동 국제 군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샌프란시스코 조약 및 기타 국가 간 정상화 협상의 결과에 개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기의 과도기적 정의 집행의 판을 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역사 연구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⁴ 일본 제국이 점령 혹은 식민화했던 지역을 해방한 이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점

⁴ 이 시기에 대한 역사 연구에 관해서는 Dower(1979)을 참고하라.

하는 위치로 올라서면서 미국은 군사-안보, 자유 시장을 채택한 피후원국, 특히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을 연결함으로써 반공 네트워크를 세웠다.

문헌 학자들은 미국의 대동북아 냉전 정책이 극동 국제 군사 재판 회부 기간에 결정적 전기를 맞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재판 직후 1949년에는 공산당 ‘중국 상실’이 일어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1947년 2월 1일 총파업에 대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진압 명령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점령 정책은 점차 더욱 노골적으로 반민주적, 반노동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냉전정책은 일본을 빠르게 재무장시키는 동시에 재판에서 여러 주요 인사를 제외시켰다. 미국의 일본 점령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전쟁 기간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미 전쟁 이후 반공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 사령관인 히로히토 일왕을 유입시킬 만한 효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전후 일왕을 전범 재판에서 제외했다(Fujitani, 2001: 379-402). 마찬가지로 강력한 산업화론자이며 만주 지역 고위 관료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당초 A급 전범으로 구속되었으나 나중에 재판 없이 석방되었다.⁵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자 기시는 즉시 친미였던 자민당 당수가 되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군사, 정치, 사법적 패권에 종속되었고 오키나와는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종속 상태에 있다.

동경 전범 재판을 반식민지, 반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오랫동안 이 재판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주민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즉 일본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때문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백인 패권 아래 유지되던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고 이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누리던 식민지, 재산, 특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처형된 것임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서구 언론에도 알려진 난징 대학살과 같은 몇몇 잔혹행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은 전체적으로 일본군이 점령한 광대한 지역에서 여성에게 자행되었던 조직적인 군사 성범죄와 같은 일본의 전쟁 범죄 및 아시아와

⁵ 기시의 주장에 관한 간결한 요약은 住谷雄幸他(1999: 5, 17)를 참고하라.

태평양 제도 주민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천만 명의 유색인종에게 저지른 잔혹행위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오롯이 인지하지 못한 재판의 무능은, 서구 중심적인 ‘인간성’ 개념의 계보에서 두드러지는 누락과 배제를 증명하는 사례로 비난받았다.⁶ 다시 말하자면, 극동 국제 군사 재판과 그 유산은 냉전기 미·일 동맹을 추구하기 위한 ‘승자의 관용’을 보여주는 시연장으로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미국의 지역 패권 아래에서 비차별의 문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되었다. 동시에 전후 배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정책은 일본의 배상이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질된 전쟁 배상금은 해방 이후의 사회에서 그 전보다도 더욱 주변화된 일본 침략의 수많은 희생자가 아니라 금권정치, 기업 독재, 그리고 그 밖의 반민주적 정권을 지원하는 데로 흘러들어갔다(内海愛子, 2002).⁷

물론 모든 동맹국들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대한 처분, 그리고 일본과 일본의 구 식민지들을 이 지역에서 반공의 보루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뜻을 같이 한 것은 아니었다. 1965년 기본 협약을 두고 벌어진 한·일 협상에서는 식민 지배 보상 관련 문제가 조명되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급진정치, 특히 1960년대 시민 봉기, 반베트남 전쟁 시위와 이후에 계속된 민주화, 반독재 운동의 밑바탕에는 과거의 전후 처리 협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냉전 초·중기에 자리가 잡힌 아시아 지역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체약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공고해진 국제 구조 및 그와 관련한 전쟁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 국가가 타국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정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국가 간 관계 정상화 조약들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새로

⁶ 최정무는 국제사회가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를 아시아와 태평양 위안부 문제와 얼마나 다르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지적했다(Choi et al., 1997: v-xiv).

⁷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배상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리카돌호(1999), 倉沢愛子(1999: 35-77)를 참고하라.

운, 또는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법적 분쟁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⁸

미국의 냉전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집행했던 과도기적 정의는 단지 공산주의의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냉전이 일본 제국의 붕괴와 제2차 세계대전의 격동 이후 급격히 변화된 세계를 지향하며 당시에 진행하던 다양한 반식민주의와 사회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⁹ 미국 주도로 벌어진 세기 중반의 전후 사법 집행 때문에 특정한 폭력 사태들이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전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 시대의 여러 유산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냉전 질서가 폭력 문제를 흐리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 기간 동안 벌어진 극악무도한 위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선별적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과도기적 정의가 달성될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 변혁적 지식이 봉쇄당했다는 점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의 ‘시정’ 문화는 반세기도 넘는 냉전 시대의 과도기적 정의의 조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던 식민지적 구조와 탈식민지화의 기나긴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예전의 실패한 보상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상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류학자 앨런 펠드먼(Allen Feldman)이 “인종적, 젠더적, 성적, 민족적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장기 지속(longue durée)”이라 규정된, 근본적 폭력의 일부와 그것의 시정 불가능성을 조명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합의했던 배상 문제 해결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애초의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저 새롭게 명명된 사상자들을 기존의 명단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냐의 여부, 그리고 누군가의 폭력에 대한 희생자의 문의를 해결하

⁸ 반면, 냉전 역사 서술 때문에 오랜 기간 잊혀진 폭력 사태에 대한 뒤늦은 배상을 받고자 했던 운동들은 기존 국제 협정이 배상에 대한 국가의 권리는 포기했는지 몰라도 국가 간 합의가 개인의 배상 청구 권리를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⁹ 미국 역사가 조너선 네이셀(Jonathan Nashel)은 냉전의 이러한 측면을 매우 간명하게 표현했다. “냉전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골치 아픈 외교정책 문제 두 개는 이것이다.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들을 시장 관계의 자본주의망 속으로 확실히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국민 국가들이 공산화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Nashel, 2000: 132-154, 134에서 인용).

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한 한계선 그 자체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과거의 정의에 관한 대체적인 조망, 그리고 폭력, 수난, 손실이라고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조명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의 ‘시정’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형성하게 된 제도적, 인식적 구조 비평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과거가 진술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지적 전제조건들과 비대칭적 권력 관계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 사회 정체성, 법, 국가에 관한 지식 생산의 정치와 관련하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¹⁰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로 작동하는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도한 동서 블록에 좌우되었던 냉전 초기의 전후 합의에 비해, 20세기 말에 일어난 시정 문화는 점차 젠더적, 인종적 소수자 집단, 식민지와 범식민지의 신민, 이민자, 실항 민족,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리를 상실한 집단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상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온 동시에 자신들의 역사적 정의를 표명할 수 있는 국가 하위 혹은 상위 공간에 의존했다. 국가 중심의 시정, 사과, 화해에 대한 문제는 각 국가 공동체들 내에서 깊은 의견차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 전까지 시정되지 못한 과거의 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1990년대 이후의 시정 노력은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규율하는 방식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자아, 사회성,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세기 전환기에 일어난 이와 같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요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규범성과 정통성을 여지없이 흔들어놓는다. 역사적 정의에 관한 1990년대 이후의 투쟁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문화 전쟁’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국민사는 역사적 정의라는 더 큰 투쟁의 필수적인 일부이자 그러한 투쟁이 촉발했던 지식 정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¹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Yoneyama(2016)를 참고하라.

III. ‘위안부’ 시정 문화

1990년대 이후 시정 문화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일본의 전시 중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아시아/미주의 초국가적 페미니즘 운동보다 냉전기의 과도기적 정의인 감독을 실패한 탈식민지화의 지표로서 강력하게 규명했던 분야는 없었다. 중군 ‘위안부’를 상대로 일본이 저지른 폭력에 관한 시정 문화의 계보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여전히 이 지역을 물질적으로나 담론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냉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장기 지속’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 사안은 일본 중군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김학선 씨가 1991년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비로소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일본의 전시 중군 위안부 제도의 존재는 여러 비망록, 문학 및 예술 작품 등 기타 형식을 통해 다양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 제도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인신 매매한 행위, 다시 말해 여성 인권 침해임을 국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1990년대의 국제적 합의, 그리고 전시의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명시하게 된 UN 규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전시 중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시정 운동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범아시아적 교류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윤정옥 교수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생존 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윤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일본 군사 성노예 징집 여성을 위한 한국 위원회(이하 한국 위원회)를 조직하고 서울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생존자들의 정기 가두시위를 시작했다.

여러 해에 걸친 한국 위원회의 시정 운동 결과 일본 측에서 일련의 대응이 돌아왔다. 1992년 역사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소 제도의 운영에 군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히는 자신의 문헌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남북한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에 이어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1993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 위안소 여성 충원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사과와

참회'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고노의 담화문이 국가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문제를 오롯이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金富子·中野 敏男, 2008). 그러나 정부의 직접 개입에 관한 담화문의 모호한 태도와는 별개로 고노 담화문이 일본 국내 공교육에 즉각적으로 중대한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노 담화문이 발표되자마자 7종의 정부 검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새로운 국가적 합의를 반영했고 일본의 전시 군사 위안소의 역사에 관한 서술을 포함했다. 1993년의 전환은 이 지역에서 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대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같은 해에 친미적인 자민당의 40년 가까운 집권 또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감수성은 일본의 민족주의적 수정주의라는 강력한 역풍 때문에 금세 사그라들었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아시아 여성 기금(1994~2007)의 설립을 촉발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은 새롭게 드러난 여성 인권에 대한 일본의 전시 범죄와 관련된 도덕적 대응이었지만, 이전까지 국가 간 정상화의 합의 내용을 흔들어놓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아시아 여성 기금은 애초에 이전의 정치적 합의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점을 불완전하게 해소하는 해결책으로 수립되었다. 한국 위원회와 여타 단체들은 각각 이 기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처럼 비사법적이고 도덕적인 해법은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시정 문화가 냉전의 신식민주의적 속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이 문화가 1970년대에 한국, 필리핀,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주도 아래 일어났던 섹스 관광에 대한 반대 운동과 계보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범아시아적인 초국가적 페미니즘 시정 운동의 진행 경로는 ‘위안부’ 시정 문화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보편적 폭력에 대한 비평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범태평양적 자본주의 구조의 구성 요소로서 성/젠더 폭력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1970년대의 섹스 투어 반대 운동은 일본이나 미국의 남성들이 개인적으로 여성을 사는 상업적 관행에 대한 캠페인에만 제한되지 않고 섹스

관광 산업이 일본의 식민지 관계가 성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이자 신식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초국가적인 페미니즘 섹스 관광 반대 운동은 냉전기 아시아·태평양의 불균등한 발전이 성적이고 계급적인 조건을 띠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비롯한 여러 초국적 페미니즘 네트워크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민간 재판소인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조직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松井やより, 2000: 108-115).

동시에 한국의 좌파적 페미니즘 시정 문화는, 비록 천차만별이기는 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후 탈식민지화 및 신식민주의적 구조와 관련한 폭넓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전시 군사 위안소 제도와 관련한 시정 운동은 아시아의 일본식 식민·군대성이 남긴 반민주적 유산에 맞서는 투쟁에 필수적인 요소로 발전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하고 과거의 '위안부들'에게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이전 정권들이 냉전적 군사-안보 제약의 결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잔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페미니즘 인류학자인 최정무와 C. 새라 서(C. Sarah Soh)는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국가 책임을 회피해온 것을 비난하면서 '위안부' 문제 시정 운동을 통해 오랫동안 생존자들과 그들의 역사를 주변화시킨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여성적 가치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측면이 있음을 밝혔다(Choi et al., 1997; Soh, 2008). 어떤 초국가적 페미니즘 관점, 특히 범태평양적인 한국 디아스포라 페미니즘 비판과 궤를 같이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 제국의 중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가 기지촌을 비롯해 지난 60년간 이 지역에서 신식민지적 미군 주둔을 통해 지속된 여성에 대한 항상적 폭력 구조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Kim and Choi, 1998; Moo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전시 군사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는 불균등한 탈식민지화와 식민 이후 폭력의 지속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고도 각별하게 얽혀 있다. 반세기가 넘는 냉전기 과도기적 정의의 실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990년대 이후 시정 문화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식민주의와 제국적 지리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회를 열었다.

IV. ‘피후견국’의 ‘남성 히스테리’

흔히 신민족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로도 불리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1990년대 이후의 초국가적인 페미니즘적 시정 운동에 대한 광범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본의 전시 중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와 관련한 고노 담화에 이어 등장한 비교적 폭넓은 대중의 합의에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새역사 교과서 만들기 모임(新しい教科書を作る会)’(이하 새역모)이 주도한 운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96년 설립 이래 학자, 작가, 언론인, 정치인, 전직 교사, 기업가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일본의 식민, 군사 침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학술적, 비학술적 저작을 격렬히 공격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시정의 윤리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여타 차원의 모든 배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1년 새역모는 2종의 중학교 교과서를 출판했다. 낭만적으로 재구성된 국민사를 제시한 역사교과서와 근대의 가부장적 가족 가치를 미화하는 윤리 교과서였다.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하고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 목록에 추가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국민사 논쟁이 촉발되었고 전국적으로 해당 교과서 채택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하에서 다음 두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새역모의 수정주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역모와 지지자들은 그들만의 역사관 때문에 논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사 논쟁이 실제로는 특정 국민(국가)을 구성하는 역사에 대한 관념 논쟁만큼이나 젠더와 성 규범에 대한 전쟁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둘째, 수정주의적 담론은 국내 공교육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범태평양적인 인정의 정치에 대한 인종적 불안이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 특히 미국과 관계 속에서의 지위에 대한 염려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결코 화목한 관계는 아니지만, 새역모는 자칭 우익 혹은 보수 정치에 동조하는 여러 단체와 협업을 해왔다. 새역모의 누구보다 긴밀한 파트너로는 자민당의 극우 당원 집단이 있다. 이들은 일본의 전쟁 잔혹 행위와 식민 지배만 특별히 문제시해서는 안 되며, 일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

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¹¹ 수정주의적 비판을 구성하는 세 가지 두드러진 논점이 있다.

첫째, 수정주의자들은 쿼어 페미니스트 정치를 끊임없이, 격렬하게 공격한다. 그들은 젠더와 연관된 세 가지 공적 조치에 반대해 왔다. 국가 주도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 프로그램(男女共同参画), 이성에 규범의 젠더 구분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이른바 ‘무젠더’ 교과과정, 그리고 성병,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고취하는 성교육이 그것이다.

2005년 새역모의 창립 회원이자 독문학과 독일 철학자인 니시오 칸지(西尾幹二)는 새역모의 발자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가 새역모를 설립하고자 했던 약 10년 전, 그 출발점은 젠더 이슈(남녀 문제)였다. 물론 우리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사적 유물론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역모가 실질적으로 창립될 수 있었던 동력은 전시의 성 문제였다(西尾幹二, 2005: 134).

새역모의 또 다른 주요 창립 회원인 교육학자 후지오카 노부카즈(藤岡信勝)는 니시오의 회상에 동의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종군위안부’가 포함되어있던 것이 그가 수정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藤岡信勝·伊沢元彦, 1998: 16).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국민(국가)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 서술을 일관되게 고취해 왔다. 이들의 당초 공격 대상은 좌파적인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그리고 전후 일본의 역사 서술에 비판적 정통파로 자리잡은 사적 유물

¹¹ 보수 수정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심리·역사적 분석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米山リサ(2005: 317-356)를 참고하라. 자민당 극우 당원들이 후쇼샤(扶桑社)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지역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歴史教科書 検定 ‘慰安婦’ 削除に右に 倣え、ちらつく 政治 圧力”, 『中国新聞』(2001년 4월 4일); “次の狙い ‘採択 10%’”, “つくる會教科書誕生まで”, 『朝日新聞』(2001년 4월 4일). 새역모는 2007년 출판사를 후쇼샤에서 지유샤(自由社)로 변경했음을 발표했다.

론이었다. 새역모는 ‘자학사관’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움직였다. 이 용어는 일본이 패전 이후 부당하게 대표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과 모호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발화를 통해 학대받는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학대받느냐의 문제가 명확해지는 반면, 이 용어는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남은 덕분에 다의성을 띠게 되었다.

2014년에 이 용어는 공식적으로 자민당이 국가 차원에서 극복하도록 지지해야 할 문제로서 정강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새역모와 유관 단체들은 일본의 군사적 만행과 식민지에서의 폭정을 가르치는 사적 유물론적 교과서가 진보적 젠더, 성 교육과정과 결합해 작용하면서 형편없는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인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변했다.

끝으로, 역사 수정주의는 국제 규범에서 일탈적인 일본의 주권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의 전쟁 수행 권리 포기를 명시한 소위 평화 조항이라는 헌법 9조를 겨냥한다.¹² 궁극적으로 수정주의자들은 연합군이 점령군으로서 일본인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전후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정주의자들의 가부장적 민족주의는 일본의 주권, 즉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쟁 수행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 추동되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전쟁에서의 패배, 외국군의 점령, 탈군사화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는 근대적이고 규범적인 국가 표준으로부터의 모든 일탈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규범적 국가 주권의 회복이라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 우위에 스스로 기꺼이 종속되는 범태평양 동맹 구조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수정주의의 비판적 연구는 냉전 환경의 종식과 연관된 전반적 불안감

¹² 헌법 9조는 다음과 같다. “정의와 질서에 기반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며, 일본 국민은 영구적으로 국가의 전쟁 수행 권리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 혹은 그 위협을 포기한다. 상기 문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타 전쟁 수행 능력을 결코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국의 전쟁 수행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http://www.kantei.go.jp/foreign/constitution_and_government_of_japan/constitution_e.html, 최종 검색일: 2014. 2. 12)

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¹³ 특히 후지오카는 ‘거대한 소련’의 붕괴가 ‘반일역사교육’에 맞서는 성전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단언한다(藤岡信勝, 1997: 195). 따라서 역사 수정주의는 동서의 이념적 양립 구도가 해체된 이후 적 설정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깊은 불안감에서 촉발된 바가 크다. 나아가 수정주의 담론은 계몽시대 이후의 전 지구적 인종/성 관계의 복잡다단한 역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보수적 수정주의가 패배하고 점령당한 국가의 상처 입은 남성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애국적 호소가 여성 지배와 규율에 대한 주장과 깊이 얽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페미니즘적 인 식민지 및 탈식민지 연구는 이미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젠더 및 성차의 관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충분히 서술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범태평양 냉전 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던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수정주의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국민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기억은 서로 심하게 충돌한다.

아시아 지역학자인 개번 매클랙(Gavan McCormack)은 공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굴종적으로 의존적인 일본의 전후 대미 관계를 ‘피후견 국가주의’라고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McCormack, 2007). 매클랙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라난 결과물이 “미국에 대한 순종을 배타적이고 자랑스러우며 순수한 일본의 역사와 정체성에 결합시킨” 모순적인 공식이다. 수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아도취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맥락에 놓고 보아야 한다. 수정주의자들은 피후견 국가라는 냉전기 일본의 지위를 흔들어 놓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동시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역사 수정주의는 폭넓은 정치적 욕구와 고려를 한꺼번에 결부시키려고 한다. 군사적 패배와 외국군의 점령이라는 정신적 외상에서 비롯된 상처 입은 남성성에 대한 심적 반작용인 것은 틀림없지만, 일본 역사 수정주의에서 젠더화되고 성 문제와 연관된 측면은 범태평양적 지

13 평론가 사토 마나부(佐藤 学)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사토가 냉소적으로 표현했듯이 역사 수정주의는 전후 일본 역사 교육의 ‘자학적 편향’이 “냉전 이후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생각에 추동되었다(姜尚中, 1997: 187에서 인용).

리역사의 모순들이 남긴 퇴적작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일 전쟁에 관한 수정주의자들의 모순된 기억/망각에 집중함으로써 필자는 수정주의 담론에 대한 대중적 해석이 폭력과 공모, 그리고 범태평양적인 인식적·제도적 냉전 구도가 남긴 그 밖의 문제적 유산에 대한 책임 회피의 역사를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주의 담론은 미국의 냉전 군사·안보 제국에 일본이 확고하게 통합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많은 기억을 부인한다.

히스테리를 다인종적, 다문화적 동화의 정신 상태로 보았던 문학평론가 데이비드 응(David Eng)의 분석은 역사 수정주의의 핵심 측면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히스테리는 대개 실어증, 생식능력 부진, 금단 현상, 긴장 이상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신경증의 일종이다. 이러한 증상을 보다 큰 이념 구조에 차용하면서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히스테리 증상이란 “실패한 질의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¹⁴ 예를 들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도라(Dora)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히스테리 증상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명령의 불완전성을 암시한다. 성차뿐만 아니라 인종차와 정신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히스테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응은 대상자가 실제로는 차별과 비대칭이 존재하는 환경에 있음에도 이론적으로는 포용적이고 동등한 조건으로 초대받을 때 ‘인종적 히스테리’가 더욱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섭되는 대상은 반드시 통합 과정에 배치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히스테리아는 한 대상이 부분적 통합의 대가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억압이라는 상징적 폭력의 흔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응은 동화된 대상이 보여주는 인종적 히스테리를 기억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응은 프로이트 자신이 “히스테리는 역사에 대한 과몰입의 한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을 지적한다(Eng, 2001: 177). 따라서 어떤 기혼 여성이 실어증이나 금단 현상을 겪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¹⁴ 슬라보예 지젝의 문장은 다음 책에서 나온 것이다. Žižek(1989: 113), Eng(2001: 170, 176)에서 재인용.

오히려 현재 자신이 습득한 규범적 여성상이 자신의 술한 과거 기억과 모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관찰은 미·일 간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모순된 기억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히스테리 증상이라는 것이 규범화된 대상이 행사해야만 하는 기억 폭력의 지표라면, 수정주의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전후 세계로의 통합 요구에서 비롯된 심리적 질환의 신호로 읽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일본이 미국의 비호 아래 범태평양 냉전 체제로 끼여 통합된 국가였다는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식민적이고 군사화된 폭력행위의 변명거리가 되어주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 종속된 냉전 체제를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일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봉인해야 했던 기억들은 어떤 것일까?

기억 억압의 암시적 사례가 될 만한 것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대한 공식 기술에서 미군이 거의 단 한 번도 침략자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군사적으로나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통해 철저히 통합된 일본 정부는 국제법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의 핵무기 사용을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자제해 왔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짧은 히로시마 순방 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에게 결코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수정주의 국민사의 억압된 과거를 그 무엇보다 명징하게 드러낸 사례는 미 공군 커티스 르메이(Curtis Emerson LeMay) 장군에게 일본 제국 훈장인 옥일장이 서훈된 사건일 것이다. 1964년 일본 정부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그에게 이 훈장을 수여했다.

헌법 9조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위대는 일본이 전후 군사·안보적으로 범태평양 냉전 동맹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전쟁의 기억을 주변부화하는 동시에 르메이의 주도 아래 일본의 여러 도시에서 실행되었던 무차별 폭격이 몰살의 의도를 띠고 있었음을 은폐해버렸다. 르메이는 미군 공습의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네이팜 탄의 사용을 고안했었다. 르메이의 군사 전략과 아시아 민간인에 대한 네이팜 탄 사용 방식을 계승한 사

람이 미군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trange McNamara)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응이 언급한대로 히스테리 진단은 “질환자가 부인하고, 대체하고, 묻어버린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종속된, 그러나 충실한 동맹국으로서 일본이 자신의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인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한 역사적 기억들은 숨겨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남성 히스테리’는 계속해서 보수적 수정주의의 옹호자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남성 히스테리의 치료법이 아니다. 히스테리가 폭력이 일어나는 주요한 공간, 그리고 부인된 과거가 ‘부재하는 현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러한 증상이 지목하는 억압의 구조적인 조건 그 자체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비판적 분석법을 찾는 것이다.

V. 결론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신민족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정치철학자 강상중은 미국이 새역모와 다른 수정주의 단체를 바라보는 모순적 방식을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수정주의자들은] 반미 현수막을 흔들고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려는 욕구를 품고 있지만 이를 말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확실히 이들의 운동은 역사를 재정의하기 위한 상향식 운동이지만 거기에는 규제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다. 미국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이 국가 정책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姜尚中, 1997: 198). (강조는 필자 추가)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역사를 재정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냉전 체제와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조에 대한 도전이자 동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수정주의

답론은 뜻하지 않게 1990년대 이후 시정 문화가 제기한 가장 급진적인 도전들과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위안부’ 문제 시정 운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의 시정 문화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과도기적 정의가 성급하게 종결되어버렸음을 폭로했다. 나아가 최근의 사법적 해결 시도 중에는 과거 냉전기에 과도기적 정의를 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만들어낸 제도들에서 비롯된 시정 불가능성의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지만 1990년대의 시정 운동과 역사 수정주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범태평양 냉전 질서의 노모스(nomos)에서 비롯된 인식적, 제도적 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로 뚜렷이 분기하는 이 두 가지 경로를 한데 모음으로써 우리는 (상향식 운동의 일종으로서) 일본의 보수적 수정주의가 반박하려고 하는 근원적 폭력과 억압의 순간을 뜻하지 않게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운동은 심오한 정치적 합의가 두 경향을 엄청난 거리로 갈라놓고 있음을 즉시 드러낸다.¹⁵ 그 한 가지 예로 수정주의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패권에 대한 의문 제기엔 말을 흐리는데 이는 초국가적인 ‘위안부’ 시정 운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수정주의자들은 국민사의 일부로서 20세기 초반 좌파 급진주의의 역사와 그 이념이 일본 제국 전역에 걸쳐 보여주었던 파급력에 관한 내용이나 반미, 반군주제, 반군사기지 투쟁, 강성 페미니즘, 그리고 냉전기에 성장한 반핵 시위가 범태평양과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던 역사는 껴집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탈식민지 시기 소수인종화된 사람들은 수정주의적 국민사 서술의 일부로 여기지도 않는다. 수정주의 국민사 서술에서 수정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강상증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존재”에 규제 당한다. ‘위안부’ 시정 문화가, 특히 그 문화가 아시아/미주의 초국적 페미니즘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피후견국의 협조 속에 유지해온 군사 주둔의 비대칭적 구조라는 장기 지속에 급진적인 도전을 제기했다는 사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¹⁵ 유사한 형태의 ‘비판적 병렬’ 분석 방법에 관해서는 Espiritu(2014)을 참고하라.

이 글에서 필자는 국민사 문제를 단일한 국가의 국내적 분석틀을 넘는 위치에 놓고 살펴보았다. 즉, 국민사 문제를 냉전 체제의 범태평양적, 미·일, 제국 간 연루의 맥락에 놓고 보려고 했다. 또한 초국적인 ‘위안부’ 시정 문화와 일본의 민족주의적 수정주의의 반발 사이에 숨은 연결고리와 접점을 포착함으로써, 이들이 비록 정치적 전망에 관해 대척점에 서 있으며 그 주창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담론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친 폭력의 기억에 대한 억압, 시정 불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적 비대칭, 즉 지난 수십 년간 냉전 체제를 지탱했던 복잡하고 문제적인 요소들을 시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물론 역사의 연결고리와 교차점, 복잡한 관계에 천착하다 보면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과오의 책임이 희석되고 사라질 위험이 있다. 최소한 필자가 상기한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쇄적 비평이 과거의 폭력 사태 각각의 독특한 특성과 지역적 특이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폭력 사태와의 복잡한 구조적 교차관계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앞서 보았듯이, 국민사 문제 그리고 국민사 문제를 포함하는 기억과 정의를 둘러싼 더 넓은 투쟁은 국가의 자격, 민족, 젠더, 성, 인간성에 관해 서로 경쟁하는 모든 개념과 불가분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논란이 되는 시공을 헤쳐나감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깊이 통합된 세계에 걸맞은 새롭고도 급진적인 친밀감과 정치적 감수성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매우 신중하고도 역사 감각을 잃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각각의 상이한 맥락과 장소에 따라 그러한 비평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비평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 姜尚中. 1997. 「座談会: 対話の回路を閉ざした歴史観をどう克服するか? - 自由主義史観批判第2弾」. 『世界』第645号, 185-199. 岩波書店.
- 金富子·中野 敏男. 2008. 『歴史と責任 - 「慰安婦」問題と一九九〇年代』. 東京: 青弓社.
- 内海愛子. 2002. 『戦後報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東京: 山川出版社.
- 藤岡信勝. 1997. 「私が反日歴史教育に挑んだ決定的な動機 - 1997年1月号編集長インタビュー」. 『正論』第293号, 192-203. 産経新聞社.
- 藤岡信勝·伊沢元彦. 1998. 『Noと言える教科書- 眞実の日韓関係史』. 東京: 祥伝社.
- 米山リサ. 2005. 「戦争の語り直しとポスト冷戦のマスキュリニティ」. 『なぜ、いまアジア·太平洋戦争か-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 倉沢愛子, 杉原達, 成田龍一,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油井大三郎, 吉田裕 編 1』, 317-356. 東京: 岩波書店.
- 西尾幹二. 2005. 「歴史と民族への責任(1)男女共同参画と「従軍慰安婦」に通底する病」. 『正論』第394号, 128-140. 産経新聞社.
- 松井やより. 2000. 「なぜ裁くか·どう裁くか- 法廷の枠組み(特集: 戦時性暴力- 市民による審判へ)」. 『世界』第682号, 108-115. 岩波書店.
- 住谷雄幸他. 1999.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 東京裁判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編. 東京: 青木書店.
- 倉沢愛子. 1999. 「インドネシアの国家建設と日本の賠償(講和問題とアジア)」. 『年報·日本現代史』第5号, 35-77. 現代史料出版.
- リカドルホセ. 1999. 「日本の戦後国際社会への復帰とフィリピン(講和問題とアジア) - 中野聡訳」. 『年報·日本現代史』第5号, 78-84. 現代史料出版.
- Ang, Len. 2001. *On Not Speaking Chinese: Living between Asia and the West*. London: Routledge.
- Chapman, Roger. 2009. *Culture Wars: An Encyclopedia of Issues, Voices, and Viewpoints*. Armonk, New York: M.E. Sharpe.
- Choi, Chungmoo et al. 1997.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In Chungmoo Choi, ed. *A Special Issue of Positions* 5, no.1, 1-344.

- Dower, John. 1979.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Cambridge: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 El-Tayeb, Fatima. 2011. *European Others: Queering Ethnicity in Postnational Europ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ng, David. 2001. *Racial Castration: Managing Masculinity in Asia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Espiritu, Yen Le. 2014. *Body Counts: The Vietnam War and Militarized Refuge(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ujitani, T. 2001. "The Reischauer Memo: Mr. Moto, Hirohito, and Japanese American Soldiers." *Critical Asian Studies* 33(3), 379-402.
- Hunter, James Davison. 2009.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Kim, Elaine and Chungmoo Choi. 1998 *Dangerous Women*. New York: Routledge.
- McCormack, Gavan. 2007.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London: Verso.
- Moon, Katharine H. 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ashel, Jonathan. 2000. "The Road to Vietnam: Modernization Theory in Fact and Fiction." In Christian G. Appy, ed. *Cold War Constructions: The Political Culture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1945-1966*, 132-154.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Soh, C. Sarah. 2008.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oneyama, Lisa. 2003. "Traveling Memories, Contagious Justice: Americanization of Japanese War Crimes at the End of Post-Cold Wa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6(1), (February 2003), 57-93.
- _____. 2016.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Žižek, Slavoj.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